



#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북한핵 보도

안 차 수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과**학커뮤니케이션이 추구하는 최고의 윤리는 진실성이다(김영옥 & 박성철, 2005). 진실성의 추구는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있어 핵심적 개념이기도 하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특히 언론의 과학 보도는 이러한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 보도의 정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실의 확인과 방법론의 검토, 공중 의제로서의 가치 판

단, 오류와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일반 대중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 등에서 과학 보도의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과학 보도는 주변성과 비전문성, 피상성과 선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김동규, 2000).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침체한 과학 문화 환경과 언론사 내부의 열악한 취재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은 충격적 사회 이슈이자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과학 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학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논의를 제공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북한의 대응과 같은 세계 체제적 논의에서부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질서, 남북

문제와 남한 내 이념적 갈등 등 북한은 오히려 정치적 담론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논의가 과학적 영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학 보도에서 출발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 보도를 과학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 국한시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북한 보도와 정확성과 관련된 난맥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보도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정보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북한에 관한 정보는 information이 아닌 intelligence로서 많은 경우 언론 취재의 영역 밖으로 존재해왔고, 취재의 영역에서 조차 확인 가능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정보력은 미



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의 도움에 크게 기대고 있는 현실이다. 로버트 김 사건은 이러한 대북 정보에 있어 제한성과 의존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정보의 객관성과 진실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며 정보가 가지는 총체적 함의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 관련 정보는 객관성과 정치성이 혼재한 영역이며, 따라서 과학과 이데올로기가 중첩된 지점이기도 하다.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북한 관련 정보의 접근과 해석의 준거틀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북한 보도 오보 사례**

**•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 길재경 부부장 망명설**

2003년 5월 17일 연합뉴스에 의해 “북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핵심 측근인 길재경 서기실부장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염기순 제1부부장의 차남 염진철이 최근 미국에 망명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이후 석간신문인 문화일보에 대서 특필되고 지상파 3사에서 해설까지 곁들여져 보도되었다. 길부장은 몇 해 전 사망했으며 평양애국열사릉의 묘비 사진이 공개되면서 오보로 판명됨.

**• 룡천 참사**

2004년 4월 22일 북한 룡천역에서 대규모의 폭발 사건을 두고 미확인 풍문을 근거로 조선일보는 “이런 점에서 북한 내 반김정일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조 차량에 승용차를 충돌, 대형 폭발 사고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명 “김정일 테러설”로서 서방 언론들 역시 사고 원인을 두고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성한 추측성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북한은 사고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정확한 사고 원인을 공개했다.

“질산암모늄 비료를 적재한 화차들과 유조차들을 같이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BC방송은 폭발 18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폭발 사고 현장에 거대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라며 위성을 통해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이라크 전 때의 폭발 장면으로 뒤늦게 오보임이 밝혀졌다. 국내 언론에서도 받아 사용했다가 삭제하였다.

**• 량강도 폭발 사건**

2004년 9월 9일 량강도 김형직 군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대부분의 언론은 1면 머리기사로 량강도 폭발 소식을 전하며, 폭발의 원인을 ‘핵실험설’, ‘단순 사고 폭발설’, ‘북한 지휘부 내부 암투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자작극설’ 등 여러 가지로 추측했다. 일부신문

은 미국 정가에 떠돈다는 ‘10월 핵실험설’과 ‘북한 핵실험 준비설’까지 연결하였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국 외교관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면서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악 폭파’ 작업이라고 해명했고, 미국과 한국 정부 역시 방사능 물질 검색 결과 등으로 “머섯 모양의 구름”에 대한 핵실험은 아닌 것으로 판단, 10일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 북한 이상 징후설**

“북한 관영 언론들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항상 붙여온 ‘경애하는 지도자’라는 수식어를 생략했다.” 2004년 11월 18일 연합뉴스 도쿄발 기사는 이후 일파만파 한국 언론과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초상화 철거, 위대한 영도자 수식어 생략, 북한 내 반정부 삐라 살포, 휴대 전화로 외부에 연락이 많아지는 등 휴대폰 서비스 중단 등의 사실을 언론이 연일 보도하면서 북한 내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 기사를 쏟아내었다.

김일성 초상화와 함께 걸려있던 김정일 초상화가 내려졌다면 절대적 지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경애하는 지도자의 호칭을 관영 통신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면 심상찮은 조짐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정원과 중국 당국, 북한 당국, 그리고 미 국무성에서 이상 징후설에 대해

<표 1> 한겨레 / 조선일보 북한 핵실험 보도 내용 분석(10.10~10.16)

	한겨레	조선	합계
과학 관련 보도	37 (15.3%)	26 (11.8%)	63 (13.6%)
경제파급 및 영향	29	33	62
외교 및 주변국 동향	36	18	54
미국의 움직임	22	23	45
정부 및 청와대 대책	18	22	40
유엔 및 안보리 제재	21	17	38
정치권 및 국회	18	15	33
시론 및 사실	20	13	33
진단 및 분석	13	9	22
시민/단체 반응	7	14	21
정책비판	3	13	16
북한반응	8	4	12
외신	4	4	8
기타	5	9	14
합계	241	220	461

근거없음을 확인하였지만 12월에는 미국의 UPI가 김정일 사망 시나리오를 내보내기에 이른다.

● **고영희 사망설**

2004년 6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 고영희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 말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온 소문을 우리 언론이 추측 보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급기야 8월 말에 “고영희가 8월 13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는 오보를 낸 며칠 뒤 고영희가 두세 달 전에 사망했다고 확인하였다. 사망 날짜와 사인도 잘못 판단한 명백한 추측성 오보였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였고 정부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었다.

● **2005년 6월 위기설**

2005년 4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U.S. Warns China North Korea May Test Bomb Soon’을 통해서 핵실험설을 제기하면서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뉴욕타임즈까지 가세하게 된다. 이어 한국의 언론들이 ‘북, 내달 핵실험 가능성’, ‘이르면 6월 중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6월 위기설을 만들었다.

● **강석주 연설 오보**

2006년 9월 25일 조간신문들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한은 핵무기 5~6개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설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국 북한문제 전문가 로버트 칼린이 ‘추락하는 토끼’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픽션으로 작성해 노틸러스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판단하고 비중있게 보도함으로써 대형 오보를 내었다.

**북한 핵실험 보도**

북한 핵실험 보도에 나타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과 한겨레를 대상으로 핵실험 다음날인 10월 10일에서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북한 핵관련 보도를 분석하였다. <표 1>은 각 신문의 북한 핵실험 관련 보도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내용 분석 결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과 관련된 기사는 한겨레의 경우 37건으로 15.3%를 차지하였고, 조선일보의 경우 26건으로 11.8%를 차지하였다.

핵실험이 실험 지점, 규모와 위력, 그리고 성공 여부의 진위 판단 등 과학적 사실과 결부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과학 관련 보도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핵실험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는 주로 실험의 진위 판단이나 성공 여부, 그리고 실험 지역을 둘러싸고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는 것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핵실험의 성공 여부와 진위 여부에 대한 과학 관련 보도는 전체의 35%에 이르고 있어, 언론의 최대 관심은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진

<표 2> 북한 핵실험 관련 과학 보도 내용 분석

	한겨레	조선	합계
실험의 진위 및 성공 여부	11	11	22
실험지점	7	4	11
핵실험/핵무기 일반	4	3	7
폭발의 규모 및 위력	5	1	6
핵무기 제조/보유/기술	3	3	6
핵실험 관련 안전성	3	1	4
추가 핵실험	2	1	2
핵실험 정보	1	1	2
동북아 핵	1	1	1
북한의 대응			1
실험 시기			1
합계	37	26	63

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리고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에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실험 위치를 둘러싸고 몇 차례의 혼란과 수정을 반영하듯 실험 지점에 대한 보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핵실험과 핵무기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전달하는 보도 역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한겨레의 경우 폭발의 규모와 위력에 대해서도 과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핵실험을 통하여 본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과 보유에 대한 예측을 전문가의 인용과 더불어 소개하기도 하였다.

## 논란

### 1. 핵실험 장소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 이후 국정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에 따라 핵실험 장소를 “함경북도

무수단리”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오후에는 무수단리에서 48km 떨어진 김책시 상평리로 수정하였다.

나흘이 지난 13일 다시 길주군 지역인 북위 41.267도, 동경 129.179도로 수정하였다. 다시 15일 주변국, 특히 중국 4개 관측소의 자료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앙을 위도 41.274, 경도 129.095로 수정 발표 하였다.

다시 7km 떨어진 위치로 중전부처 핵실험 장소로 예측돼 온 함북 길주군 만탑산 인근으로 미국지질조사국, 일본 기상청,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목한 진앙과 가까운 곳으로 판명되었다.

국정원이 김책시 상평리로 수정 발표하자 언론은 북한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의외의 장소를 택해 위장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보도하였고, 더 나아가 길주군 풍계리의 이상 징후를 주목하며 추가 실험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2. 핵실험 규모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계에 탐지된 규모를 3.58로 감지하여 보고하였다. 핵실험 폭발 규모를 애초 0.4~0.8t으로 잡아 핵실험치고는 진위를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는 것이다.

일본 기상청이 지진파를 통해 계산한 폭발의 규모는 4.9라고 밝히자 오후에 최소 TNT 0.8kt (800t) 이상이라고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언론은 이 역시 핵실험으로 보기에는 규모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다며 핵실험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11일 정부는 진도 3.9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처럼 인공 발파에 의한 지진파에는 다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진도를 3.9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정부와 언론은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 탐지로 이행하게 된다.

### 3. 부분적 실패?

워싱턴포스트는 10일 북한이 4kt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중국에 통보했으나 실제 폭발은 훨씬 약해 핵실험이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애초 한국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핵실험 10~20분 전 중국에 통보한 10kt의 핵실험 양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후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불완전한 실험

의 가설로서 장치의 핵 가운데 일부만 폭발했을 것이란 추정(부분적 성공), 적은 양의 플루토늄 사용, 더 소형이면서 기술은 진보한 핵장치 개발, 실험 목적이 폭발력이 아닌 폭탄 설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4가지 중 하나로 보았다.

AP통신은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평 하고 터졌다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역시 “규모가 너무 작았다. 북한이 실험을 통해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1일 핵실험을 하면 땅이 꺼지거나 큰 구덩이가 생기는 등 지형 변화가 생기는데 특별한 지형 변화가 정찰위성에 포착되지 않은 점, 방사능 물질을 추적하기 위해 동해 상공에 떠 있는 정찰기로부터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은 점, 지진과 규모가 적은 점 등으로 “실험 장소 멀쩡, 방사능 0....이상의 핵 실험”으로 머리 기사를 뽑기도 하였다.

또한 12일에는 美·佛 “핵실험 믿기 어려워”라는 기사에서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의 “오랫동안 선반에 놔뒀던 뭉가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이를 폭발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실었다.

또한 AFP 통신의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를 속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라는 주장을 실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3면 “4t중 1kt폭발 핵실험이었다면 성공, 사기극도 가능”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 혹은 부분적 실패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핵실험에는 성공, 실패만 있지 부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쓰는 용어일 뿐”이라는 말을 통해서 언론의 과학보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16일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정부는 25일 제논을 검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였다.

한겨레는 14일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 핵실험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열 영상이나 방사능 촬영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다. 진위를 구별하는 기술과 평가 기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 원시적인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외상 아소 다로의 평가는 더욱 단순하다. “성공했다라면 (북한이)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뭉가 이상하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알카에다에 이전하려 한다면 중대한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패한 핵실험에 대한 경고치고는 너무 진지하지 않은가?

#### 4. 추가 핵실험

11일 오전 일본의 니혼 TV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던졌다. 2차 핵실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보로 결론이 났다.

NHK와 아사히가 니혼TV를 받아서 긴급뉴스로 보도했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세계 주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송과 인터넷들도 일본 언론을 받아쓰면서 전 세계 언론이 오보에 휘말렸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한국지질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오전 7시쯤 2차 핵실험을 미리 예상하고 잠음 수준의 지진과 감지를 2차 핵실험 실시로 판단, 오보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언론의 예측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예측의 기반에는 핵실험은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실시하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후 북한의 대비 협상용 카드가 필요한 점, 2차 실험이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공언한 점,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 풍계리 지역에서 이상 징후가 목격되는 점 등 갖가지 풍문으로 가득하였다.

20일 중국의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차 실험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며 6자회담에 나갈 수 있음을 시사



했다.

하지만 “추가실험 계획없다”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고착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2차 실험 준비와 실험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에 대한 과학적 전망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 5. 북한의 핵기술과 위협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언론의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물론 북한은 핵을 억지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일성 유훈으로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천명을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안보 위협에 미칠 핵의 영향은 첨예한 관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실험의 성공과 위력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러한 안보의 실질적 위협은 언론보도에서 대부분 가정적(if) 단서를 달고 있다.

무기급 플루토늄 1~2기의 핵무기에서부터 1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 역시 점쳐지고 있다. 탄두의 소형화는 어떠한가? 탄두 중량이 0.5~1t 정도로 가볍게 만드는 데는 미치지 못해 항공기로만 운반 가능하다는 추측에서 파키스탄 ‘핵의 대부’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미사일 장착 핵탄두를 본적이 있다’는 증언, 혹은 농축 우라늄과 수소폭탄까지 갖고 있다는 제일 북한 전문가

김명철의 호언(10월 12일)에 이르기까지 범위의 폭이 과학 보도의 한계를 넘나든 것이 사실이다.

### 과학 보도 이전에 저널리즘 윤리부터 정립해야

북한 핵실험 보도 역시 그동안 우리 언론의 북한 보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 신문의 경우 안보 불안감 부추기기는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비교적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과 경제계, 그리고 외국 투자자와는 달리 불안을 극대화하였다.

- “북한 핵실험 한반도 초긴장” (조선, 10월 10일)
- “북한, 설마 했는데...불안해서 못살겠다” (조선, 10일)
- “북한 핵실험 강행....한반도 ‘핵공포’ 덮쳤다” (중앙, 10일)
- “충격의 핵요일....시장엔 공포만 있었다 (동아, 10일)
- “낙진이 심해져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 아니냐”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인구 절반이 죽는다고 하는데, 6. 25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조선일보, 10일)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침착하게 반응하자, ‘핵 불감증’ ‘안보불감증’이라며 시민 반응을 질타했고, 증시와 외환 시장도 핵 펀치를 맞아 대공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과는 달

리 하룻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핵실험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투자자들에게 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SBS의 여론 조사 결과 핵실험의 책임이 미국 (38.1%), 북한 (35.6%), 한국 (22.8%)에 있다고 나왔다.

영국의 가디언은 ‘북한의 핵 정책은 미친 것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제 수호를 위한 매우 이성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일부 보수 신문들의 안보 부추기기는 정치적 편향으로 인한 북한 핵실험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접근에 있어 신중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보수 신문들은 ‘DJ와 노무현 8년 반 동안의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며 대북 정책의 실패 인정과 포기를 연일 촉구하였다. 나아가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 방안 마련’과 ‘전쟁 불사’와 같은 극단적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핵실험 이후에 제재와 봉쇄, 강경 대처가 정파성을 띄고 있다는 점은 보수 신문의 이념적 지형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놓치고 있는 객관적 위험성과 위협성의 조장은 간과하기 힘들다. PSI 참여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의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는 보수 진영과 언론을 통해서 대북 포용 정책의 포기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

된 반면 미국 내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핵실험 강행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두고 유독 ‘노무현 책임론’만을 질타했을 뿐 미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의 원인과 과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7년 동안 대화를 거부하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 조치가 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만일 남한 정부가 미국과 공조하여 포용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면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하였을까?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언론의 객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전문성과 저널리즘의 규범을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언론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해에 남북 상호 교류의 하나로 남쪽의 기자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였다. 신문 기자 한 사람이 평양 시민을 붙들고 물었다. “올 여름에 해수욕을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해수욕이요?” 기자의 질문에 당황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묘향

산으로 해수욕을 갑니다.”

이튿날, 남쪽의 신문은 일제히 이 사실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산으로 해수욕을 간다는 그말이 북한의 치부인 양 미리 교육받은 것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며 특종을 올렸다. 한국언론학회가 수여하는 상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참고로 북한에서 해수욕은 ‘물미역’이며 ‘수욕’은 삼림욕을 의미한다.

그뿐이 아니다 연평도 꽃게잡이로 해마다 긴장 상태다.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 대금이 북한의 군부로 흘러들어간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꽃게잡이든 골재 판매든 북한 군의 지휘하에 있다. 군대의 자립과 관련되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초보적인 북한 전문가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 인터넷을 살펴보자. “500만~3000만 달러만 있으면 원자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 (조선일보, 11일자)이 소개되었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20년간 핵개발이 체제의 안전 보장에 의미하는 중요성을 따져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이다.

우리의 노력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아져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로 하여금 강

경 일변도의 압박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외교적 노력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대차한 시기에 우리 언론은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에 앞서 사실 관계 확인의 정확성부터 챙겨볼 일이다. 

〈참고 문헌〉

김동규 (2000), 현대 언론과 과학문화, 김학수 외,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관점], 일진사, 101-185  
 김영옥 & 박성철 (2005), 과학보도와 과학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김학수, 박성철, & 정성은 (2005). 과학커뮤니케이션론, 일진사  
 민임동기 (2006), 북핵실험과 한국언론, 언개런 북핵실험과 한국언론 긴급토론회 발제문  
 양문석 (2004), 통천참사 관련 언론보도 분석, 통천참사 관련 언론보도 문제제기 토론회 발제문  
 이영중 (2005), 북한 취재와 보도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신문과 방송, 1월호, 77-81  
 이오현 (2002), ‘위기’ 부추기기, 언론과학연구, 2.  
 이철기 (2005), 맹목적으로 베끼고 앞장서 부풀리고, 신문과 방송, 7월호 110-113

\* 본고는 11월 16일 서강대에서 열린 제4회 과학커뮤니케이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